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안전 비상감박이'

### 무인 단속카메라 피해 버젓이 학교 앞 '암체 주차'

###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구간 규정 없어...논의 시급

"아침 등교 시간입니다.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16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정문. 차량 30여대가 불법 주차 또는 정차돼 있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는 시각지대는 이미 암체 운전자들에게 점령된 상태였다.

교사 A씨는 등교 30분 전, 통학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일상의 잡무다.

자녀와 함께 통학한 김모(41·여)씨는 "불법 주차 단속카메라가 달린 구간은 갓길 주차가 줄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구간은 여전히 불법 주차와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인도 위에 올라 선 차량으로 인해 건물복사야 확보도 어렵다. 고모(13)군은 "길을 건너려

다 인도 위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옆에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뻔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주택가 바로 앞에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들이 카메라가 없는 또다른 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남구 봉선동 모 초등학교 등굣길은 총 150m 구간.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50m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m 구간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학생들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도로를 가로질러 걸었다.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 간격은 1m가 채 안 된다.

해당 구역은 등굣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인도·울타리·팻말 등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출

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돼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 구간 규정이 없다.

8살 자녀를 둔 김모(37)씨는 "인도가 없는 좁은 주택가라 자녀가 도로로 걷는 것이 위태롭다"고 판단해 통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아이는 등굣길 친구와 장난을 벌이다 도로 한 가운데로 밀려났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급히 제동 장치를 밟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박모(13·여)양은 "주차된 차량에 밀려나 대부분 도로로 등교한다.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 확충과 탄력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3년째 학교 앞 세탁소를 운영한 김모(56)씨는 "물건 상·하차시 불법 주차 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만 40~50만 원에 이른다. 학생들이 없는 공휴일 등은 단속을 해제하거나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자도 '할 말'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이모(32)씨는 "주택가는 늘 만성 주차난에 시달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부러 주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땅한 주차 공



지난 16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하다.

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준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18일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철저한 단속으로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 구간 설정은 행정·도로상황 등 종합적인 것이라 쉽지 않다. 전국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 3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지역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정정은 행정·도로상황 등 종합적인 것이라 쉽지 않다. 전국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정승호기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하는 이주 노동자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안OO 씨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에 참석해 증언하고 있다.

## 전남 아동학대 심각...수도권 제외 최고

전남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 및 피해 아동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27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폭등했고,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자체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 9000여 건에서 2019년 4만 100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8.7%)과 경기(26.2%), 인천(8%)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6.2%), 경북(6%), 부산(5.8%), 전북·대구(5.1%) 순이었다.

유유나기자

## "한달간 악취와 살았다" 광주 선운지구 주민들 '분통'

### 하수구서 올라온 악취...상가 매출 급감에 환기도 불편

"한 달간 악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제때 조치했다면 이 난리는 없었을 겁니다."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일대 상가에서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30m 남짓 되는 거리에 밀집한 하수구 6곳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와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일부 상인들이 임시 방편으로 비닐·종이 상자 등으로 하수구를 덮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악취 탓인지 최근 한달간 인근 상가에는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

상인 A(60·여)씨는 "지난달부터 가게 앞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8월에 비해 지난달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급감했는데 설상가상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위생이 중요한 음식점은 더욱 타격이 크다. 그나마 찾은 손님들도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함의해 업주는 진땀을 뺐다.

업주는 "소규모 가게라 환기를 위해 창문을 항상 열어두다 보니 하수구 냄새가 가게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다. 지난 한 달간은 포

장 판매 위주로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 의원이 현장 방문한 이후에야 보수 공사 일정이 잡혔다"며 "뽀뽀는 행정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리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주택에서도 악취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초부터 하수구 악취가 나기 시작한 이후로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하소연했다.

광산구는 악취가 나기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들과 만나 현장 상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구는 상가 화장실 하수구에 색소를 흘려 오수 이동 상황 등을 관찰했고, 이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향해야 할 배관의 위치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아파트 시공사가 도맡았던 하수구 배관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이로



인해 생활 오수가 당초 계획과 달리 주택·상가가 밀집한 선운지구 일대 하수구를 지나며 악취를 발생시킨 것으로 구는 파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보수 작업을 할 것을 약속했다. 조만간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공사가 끝나도 악취 발생 여부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